

“중부세 피하고 노후생활도 보장”

# 수도권 중심 임대사업자 폭발적 증가

올 상반기 7.4만명 신규등록  
등록주택 18만채로 3배 급증  
전체 등록자는 33만명 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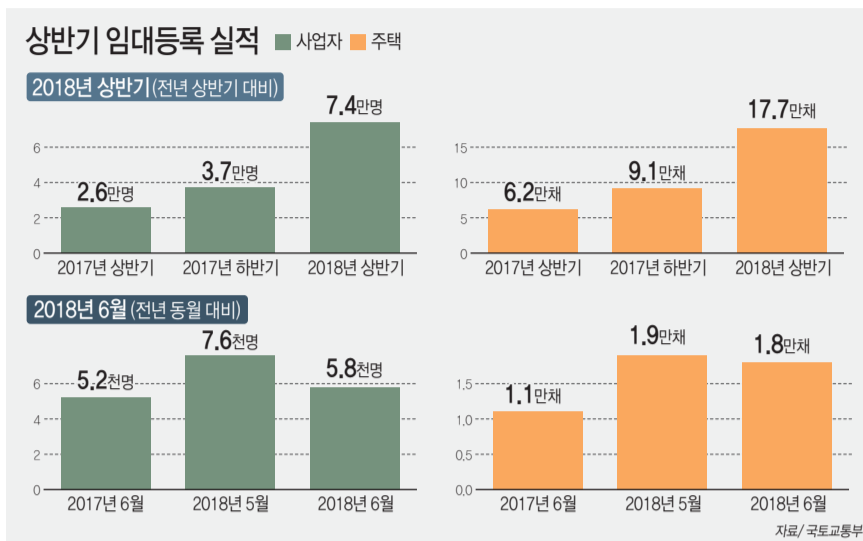
올 상반기 임대사업자 7만4000명이 등록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8배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는 전년 동기(2만6000명) 대비 2.8배, 전년 하반기(3만7000명) 대비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등록사업자 수는 지난해 말 26만명에서 33만명으로 27% 증가했다.

상반기 등록사업자의 82.2%(6만1000명)는 서울(3만명), 경기(2만3000명), 부산(4만7000명), 인천(2만8000명)에 밀집해 있다.

전체 등록사업자(33만명)의 지역별 분포도 이와 비슷하게 서울(12만명), 경기(9만6000명), 부산(2만2000명), 인천(1만3000명)에서 전국 등록사업자의 76%를 차지했다.

전체 등록사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



면 50대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26.3%), 60대(18.9%), 30대(12.9%)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활용을 위해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중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만7000채다. 지난해 상반기 6만2000채에 비해 2.9배, 지난해 하반기 9만1000채에 비해 1.9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9만3000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 8만4000채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이었다.

그 결과 6월 말 기준으로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은 총 98만2000채,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7만5000채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4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조정된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장기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20~40%에서 60~80%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중 등록된 17만7000채 중에서 서울이 6만6000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 4만9000채, 부산 1만5000채, 경북 5만5000채, 충남 5000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지난해 말 98만채에서 115만7000채로 늘었다.

6월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는 5826명으로, 전년 동월(5219명) 대비 11.6% 증가했다.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만7568채로, 전년 동월 등록분(1만1121채)에 비해 57.9% 증가했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이 1만851채,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이 6717채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높아졌다”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아 중부세 과세 표준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정책브리핑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 투자박람회’ 개막식에서 개막사를 하고 있는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 해수부 투자방향서 95억원 성과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 투자박람회’를 통해 95억원의 투자방향서와 3건의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해답의 바다,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투자 유치와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200여 개 해양수산기업과 60여 개의 투자기관, 관련 과학기술 연구자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람회에서 해수부는 사전 매칭과 투자설명회를 통해 수산물 온라인 유통 서비스 기업, 김 등 해조류를 생산하는 기업 등 3개 기업과 투자자 간 총 95억원 규모의 투자방향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종=최신용 기자

## 농식품부 300억 농식품펀드 조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에 300억원(정부 190억 원, 민간 110억 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 경영체에 이미 투자된 지분의 인수 등 투자 회수 시장을 조성하는 2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신규로 결성하고, 100억원 규모의 농식품 6차산업 경영체 투자를 위한 특수펀드(6차산업화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분야의 세컨더리 펀드는 기존의 농식품 투자조합이 보유한 지분 뿐만 아니라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펀드(PEF) 등 다른 투자조합들이 보유한 농식품 경영체의 지분 인수도 허용해 농식품 투자 회수 및 재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 산재 신청절차 간소화... 신청건수 20% 급증

## 근로복지공,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상담전화 ‘콜백’ 서비스 등도 운영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출퇴근제해 보상제도 도입 및 산재신청 절차 간소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보다 약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6월말 현재 산재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618건(19.4%)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증가건수 중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 제해 3016건 및 뇌심혈관질환 고시 개정으로

인한 재접수 362건을 제외하면 13.2%(7240건)가 증가한 것이다.

산재신청 증가의 가장 주된 요인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까지는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재해노동자들이 적기에 산재 인정을 받아 안심하고 치료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의 날인제도를 폐

지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산재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단은 노동자들의 산재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재해신청 상담전화 ‘콜백(Call-Back)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콜백 서비스란 재해를 당한 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공단 콜센터에 산재해당 여부, 처리 절차 등을 문의하면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게 되면, 사고발생 지역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해 산재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공단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를 증감비율이 과거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상(인하)되던 것을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0%까지 인상(인하)하는 것으로 개정해 내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별실적요율이란 과거 3년간 산업재해 발생실적(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로 앞으로는 특정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업무상 질병은 산재처리시 개별실적요율에서 제외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 현재, 30주년 슬로건 선정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 기념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관계자는 “1988년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30년 동안 국민과 함께하며 법전 속의 헌법을 생활 속의 헌법으로 이끌어왔다”며 “앞으로도 헌법이 국민을 위한 최고의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5월 인터넷 공모를 통해 진행된 슬로건 공모에는 2576편이 응모됐다. 현재는 광고홍보학과 교수와 카피라이터 등 전문가 심사와 재판소 직원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슬로건을 확정했다. 현재는 9월 1일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이범종 기자 jaker@

## 해수부, 정부 최초 부처 내 ‘벤처조직’

해양수산부, 정부 최초로 부처 내 벤처조직을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16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벤처조직은 2개월 동안 ‘드론 활용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해수부는 정부부처 최초로 부처 내 벤처조직인 ‘조인트벤처 1호’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 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기존의 업무분장으로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기획된 부처 내 벤처조직이다. 그간 민간에서는 이를 통한 사업들이 많이 이뤄져 왔지만 정부부처 내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수부의 여러 실·국과 소속 기관에서 선발된 조인트벤처 1호팀은 2개월간 기존의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한 가지 과제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해수부 내 벤처조직 ‘조인트벤처 1호’의 구성원인 박찬수(왼쪽) 사무관과 김경서 사무관. /해수부

과제는 지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28개 제안) 중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으로 최종 확정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수산 현장은 불법어업 단속, 양식장·적조·해양쓰레기 관측, 연안·공유수면관리, 항만보안 등 드론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

## ‘조인트벤처 1호’ 오늘 시범운영 드론 활용 현장업무 과제 추진

히, 드론을 응용한 정책수요 발굴은 범정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부처 내 다양한 부서·기관의 업무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인트벤처 1호 참여 인원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부서 추천과 지원 등을 통해 3명을 선발했으며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는 1~3년 차의 사무관 2명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주무관 1명이 참여하게 됐다. 이중 안현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주무관은 2015년부터 등대·부표 등 해상교통시설 관리에 드론을 도입하기 위해 구상해온 바가 있어 조인트벤처 1호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인트벤처 1호에 참여하게 된 김경서 사무관은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인 만큼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 해수부 온라인콘텐츠 인력 공모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 인력으로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전문임기제 나·다급)를 영입하기 위해 이달 23일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15일 해수부에 따르면 신규 채용은 작가(전문임기제 나급), 영상촬영·편집(전문임기제 다급), 그래픽 디자인(전문임기제 다급) 분야에서 각 1명씩 총 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신문방송, 광고홍보, 방송영상,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각 분야에 요구되는 관련분야 학위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7월 19일부터 23일까지(주말 제외)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해 해수부 운영지원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